

광산구 산정지구 차명거래까지 샅샅이 뒤진다

광주시 4000건 중 10% 1차조사
공무원 2명 거래 6건 확인 했지만
투기성 없는 걸로 결론

5개 구청 공직자까지 확대
나머지 3600건 정밀조사키로

광주시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제3기 신도시' 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광산구 산정
지구 내 그린벨트 매매 등 의심사태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차명거래까지 모두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산정지구 일대 전체 4000여건의 토지
거래 중 핵심지인 402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공
무원 2명이 6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번 신도시 계획 발표 4~15년 전 거래가 이뤄짐
에 따라 투기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다만 이번 1차 조사의 범위가 긴급성 때문
에 전체 조사건수 중 10%에 불과하고, 광주시와
광산구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누락한 나머
지 거래 내역과 동·서·남·북구 공무원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5일 "광주 산정지구 공직
자 투기 의혹 조사 결과 2명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
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광주시 공무원 3432명과 그 가족 71명, 광산구 공
무원 1264명 등 총 4767명이다.

시는 토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2016년부터 산정
동과 장수동 전 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 402건을 포
함해 모두 4000여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산정지구 402건의
거래자를 업무 관련자 1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리고 시와 광산구 공무원 명단과 비교
해 시 1명, 광산구 1명 등 공무원 2명이 토지를 거
래한 사실을 파악했다.

광주시 직원(5급)은 2005년 6월 5000만원에
매수한 토지(전 407㎡)와 2016년 6월 해당 토지
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려고 1800만원에 매수한 토
지(전 83㎡)를 2018년 8월 1억 5500만원에 팔았
다. 광산구 직원(7급)은 2013년 9월 5352만원에
사들인 토지(답 740㎡)를 2017년 2월 6800만원
에 매도했다. 이들은 가족 농장 등을 만들기 위해
땅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신규택지 공급 계획 발
표 시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시와
임지 선정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과 매수
시점의 간격이 길어 투기성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정부 발표 전 산정
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소식을 접한 업무 관련자

17명(시 10명, 광산구 7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71명에 대해서도 확인할 결과, 관련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을 단
순 비교한 것에 불과해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활용한 이른바 차명거래 등은 전혀 걸러낼 수 없는
형식적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산정
(동)지구에서만 지난해 11월 18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고, 이 중 최근 5년만에 처음으로 그린벨트
를 포함한 논이나 밭 거래가 6건이나 이뤄지는 등
다수의 투기정황이 있는 데도, 이번 조사에선 해당
거래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업계에선 땅 투기꾼의 성향이
개발 예정지보다는 인근 땅 매수를 선호한다는 점

에서 나머지 3600여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경우 다수의 투기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것이라는 전
망도 나온다. 광주시도 이 같은 지적 등을 감안해
경찰과 공동으로 차명거래 등을 포함한 광주시와
5개 구청 전체 공직자에 대한 산정지구 투기 관련
전수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은 긴급 1차
조사로 일단 산정지구 개발 예정지뿐만 한정하고,
시와 광산구 공무원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만 했
다"면서 "앞으로 나머지 구청 직원은 물론 산정 지
구 주변에서 거래된 나머지 3600여건도 검증하겠
으며, 경찰과 함께 계좌추적을 통해 차명거래 등
투기성 거래를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5일 오후 광주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광주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추가정확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투기 근절'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민주당 전남도당, 한전공대 특별법·의과대학 설립 공동대응

국회의원 10명 참석 당정협의회
여순 특별법 등 19건 지원 요청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올해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남의 최
대 시급 현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의 40년 숙원이자 감
염병 유행에 따른 공공 의료 강화방안으로 꼽히는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민
주당 전남도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핵심현안 19건에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회는 김영록 지사와 도정 간부, 김승남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전남도의 주요 현안을 지역 국회의원에
게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핵심 정책 현안은 ▲한국에너지공
과대학교법 제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 의과대학 설립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9건이 논의됐다.

지역 균형발전 제도개선 과제인 ▲원전 폐로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국가산단 지정 ▲방사성폐기물(핵

폐기물) 보관세 등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농
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조류인플루엔자(AI) 방
역조치 관련 제도개선 등 10건이 논의됐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비 예산 7조 6671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고 7조 원을 넘겼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에
게 사의를 표한 뒤, 시급한 지역 핵심 현안인 한국
에너지공대법 제정과 관련해 "곧 있을 내년도 신
입생 모집과 핵심시설 확보가 시급한 만큼 3월 국
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력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과 참석한 의원들은 "가
장 시급한 현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반드시

3월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여수사건특별
법, 국립 의과대학 설립, COP28 유치 등 여러 현
안을 김 지사와 손잡고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학영
산자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의장을 만나 '한국에
너지공과대학교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
법'이 3월 입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weeks
고함 고함 새롭고 능가할
빛이 새겨 넣은 2주간에 대한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3.16~10.17 4주간(12주) 임상연구 수행
고려상당심 080-023-5454 | www.iope.com